

예산 · 재정 정책연구 동향

「2023-제3호(Vol. 26호)」

본 자료는 2023. 6. 20.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분야 (p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경제동향 6월 •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경제 회복 모멘텀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p>한국개발연구원</p> <p>현대경제연구원</p>
2. 재정분야 (p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 재정동향 2023년 6월호 •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p>기획재정부</p> <p>국회예산정책처</p>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p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p>법제처</p> <p>법제처</p>
4. 정책 및 연구 (p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TSMC를 유치한 일본의 구마모토현: 강원도가 배운다 • 미국의 산불대응 기술 현대화 정책 및 시사점 • 전세사기 대책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 • 증권관련 범죄에 대한 억제력 제고 방안 	<p>강원연구원</p> <p>국회입법조사처</p> <p>한국지방세연구원</p> <p>한국금융연구원</p>
5. 뉴스브리핑 (p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 OECD, '23년 세계경제성장률 2.7% 한국경제 성장률 1.5% 전망 • 마을기업으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성장동력 찾는다 • 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 위한 공모사업 추진 	<p>행정안전부</p> <p>기획재정부</p> <p>행정안전부</p> <p>국토교통부</p>

1. 경제

출처

■ KDI 경제동향 6월호

(내용 요약) [바로가기](#)

한국개발연구원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인,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은 생산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평균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정체되고 재고율은 상승하는 등 부진한 모습
 - 반도체는 생산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여전히 위축된 모습
 - 다만, 반도체수출 금액과 물량의 감소세가 일부 둔화되는 가운데, 對중국수출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는 등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 그러나 서비스업이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였으며, 소비 관련 심리지수도 회복세를 보임.
 -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소비자심리지수도 3월 이후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 한편 건설업은 아파트 공사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집중됨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주택경기 부진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이어감.
 -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기저효과도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점차 안정되는 모습.
 - 다만, 기초적인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4% 내외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함.

■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경제 회복 모멘텀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내용 요약) [바로가기](#)

현대경제연구원

2023년 한국 경제는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6%보다 하락한 1.2%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제 주체의 심리 개선미약,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수출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 반등의 분위기 조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1.8%에서 1.2%로 하향 조정하였다.

<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구 분	2021년 연간	2022년			2023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4.3	3.0	2.3	2.6	0.9	1.5	1.2
민간소비(%)	3.6	4.0	4.2	4.1	3.0	1.3	2.2
건설투자(%)	-1.6	-3.8	-1.9	-2.8	0.6	0.3	0.5
설비투자(%)	9.3	-7.0	5.5	-0.9	4.5	-5.0	-0.3
수출증가율(%)	25.7	15.6	-2.4	6.1	-13.0	1.2	-6.1
소비자물가(%)	2.5	4.6	5.6	5.1	4.0	2.8	3.4
실업률(%)	3.7	3.3	2.5	2.9	3.1	2.8	3.0

2. 재정

출처

■ 재정동향 6월호

(내용 요약)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4.1조원 감소한 211.8조원이다.

○ 그 중 국세수입은 134.0조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3.9조원 감소하였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10.1조원**) 고려 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23.8조원 수준이다.

* 소득세 8.9조원↓(부동산거래 감소 등), 법인세 15.8조원↓(기업실적 악화 등), 부가세 3.8조원↓ 등

** 종합소득세 △2.3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기타 △2.8조원

○ 세외수입은 10.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3.7조원, 2월), 우특회계 이자수입 증가(+0.4조원) 등에 기인한다.

* 한은잉여금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3년 예산 대비로는 0.5조원 증가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 추이(조원) : ('22실적) 5.5 ('23예산) 1.3 ('23실적) 1.8

< 2023년 4월기준 국세·세외수입 수입 >

(단위: 조원, %, %p)

	'22년				진도율			'23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B)	4월 (C)	4월 (누계D)	추경 (E=D/A)	결산 (F=D/B)	본예산 (G)	4월 (H)	4월 (누계I)	진도율 (J=I/G)	4월 (H-C)	누계 (I-D)	진도율	
													예산 (J-E)	결산 (J-F)
□ 총수입	609.1	617.8	75.6	245.9	40.4	39.8	625.7	66.4	211.8	33.9	△9.1	△34.1	△6.5	△6.0
◇ 국세수입	396.6	395.9	56.8	167.9	42.3	42.4	400.5	46.9	134.0	33.5	△9.9	△33.9	△8.9	△8.9
◇ 세외수입	28.3	30.8	3.2	14.2	50.1	46.1	25.0	3.0	10.4	41.7	△0.2	△3.8	△8.4	△4.4
◇ 기금수입	184.1	190.8	15.5	63.8	34.7	33.5	200.3	16.5	67.4	33.7	1.0	3.6	△1.0	0.2
(사보기금*)	104.8	119.0	9.8	39.0	37.2	32.8	114.6	9.7	40.9	35.7	△0.1	1.9	△1.5	2.9
◇ 세입세출 외	-	0.3	0.0	0.0	-	-	-	0.0	0.0	-	0.0	0.0	-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평가

(내용 요약)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을 수립하고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방 소비세율 확대 등 재정분권 정책이 2019년부터 시작되었고,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5.8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됨.

본 보고서 분석결과,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시군세 보다는 시도세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지방이양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시행주체인 시군구의 집행률은 최근 2년간 58~59%로서 낮은 수준이므로 지역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지방 이양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결산 등 이행상황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어, 향후 재정 자율성·책임성 등 지방이양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함.

3. 재정 · 예산 관련 법령

출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개정 '23.6.20. 시행 '23.6.2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정산보고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종전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 '23.6.7. 시행 '23.6.1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및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을 구체화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및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기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문화 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 대상에 종합유원시설이나 수목원의 입장권 구입 비용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 주요내용

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유형을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특정금전신탁으로 하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사채권에 대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정함.

나.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제93조의9 신설)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를 그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도록 하되, 개인투자용국채가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받은 사람이 해당 국채의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 해당 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정함.

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의2 제5호 및 제6호 신설)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및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중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함.

4. 정책 및 연구

출처

■ 대만 TSMC를 유치한 일본의 구마모토현: 강원도가 배운다

(내용요약) [바로가기](#)

강원연구원

- 일본 구마모토현(熊本県)에 대해 온천으로 유명하고, 건축물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나 1953년 수은중독에 의한 미나마타병이 발생하여 장기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곳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 이는 오래전 일이기도 하지만, 아트폴리스(Art-police) 정책으로 세계적인 건축물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마을만들기 등으로 구마모토현은 이미지 변신을 했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대만의 반도체기업 TSMC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호기를 맞고 있다.
- 구마모토현은 지금 대규모의 반도체 제조시설(대만의 TSMC) 건설이 한창임. 시설 투자비만 1조 1,000억 엔이고, 향후 10년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4조 엔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지역에서는 이미 금융업, 부동산업 등의 활황을 비롯하여 관련 기업의 사무실 확장, 공장증설이 줄을 잇고 있다.
- 반도체 기업입지 여건 마련 및 정주여건 마련 등 기업의 수요 등에도 적극 대응했다. 국내 대기업부터 해외 대기업까지 유치한 구마모토의 사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시사하는 바가 큼. 우선, 시사점으로 2가지를 제안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문화자원이 부족하다. 공공건축물부터 문화를 입혀 문화도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 전문가 모시기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의 산불대응 기술 현대화 정책 및 시사점

(내용요약)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 미국의 산불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환경과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기후 복원력의 촉진이다. 이에 따라 초당적 기반시설법(BIL)은 자연경관 보호, 기후 위기 대처 및 낙후된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등 산불대응에 직접적인 부분 외에도 산불과 관련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종전에 산불대응과 관련한 다수의 기관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해 왔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단기술개발에 있어 일원화되고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국가적 산불대응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 특히 미국은 산불 대응 기술 현대화를 위하여 무인항공시스템 구축 및 확장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사례를 참고로, 국가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기술 도입,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전세사기 대책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

(내용요약) [바로가기](#)

한국지방세연구원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2019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대책이 시행됨.
 - 조세 분야에서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미납 조세정보 열람권이 강화되고 경·공매시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순위가 조정됨.
 - 또한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한시적으로 시행됨.
- 전세사기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차보증금과의 관계에서 배분순위가 조정된 당해세는 전세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70여년 만에 개정됨.
 - 그간 당해세 우선원칙은 그 자체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판단을 받아 유지되어 옴.
 - 특히 종합토지세는 담보물권의 대상이 된 토지, 상속세는 상속재산임이 공시된 부동산에 한정하여 인정되었고,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판단된 바 없음.
- 전세사기 문제에서 지목된 다주택자의 당해세는 주로 종합부동산세인 반면, 당해세 예외로 확보하지 못하는 재산세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임차인에 적용되므로, 고가 아파트를 포함하여 역전세 등으로 경·공매되는 모든 주택 사례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줌.
 -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매년 과세하는 재산세는 경·공매 증가로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당해세 예외로 확보하지 못하는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을 배제한 개정은 종합부동산세의 체납 실태와 함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추후 재논의할 필요.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 것으로 바람직함.
 - 또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스스로 낙찰받는 경우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그간 제도적 결함을 시정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보상으로도 이해됨.

■ 증권관련 범죄에 대한 억제력 제고 방안

(내용요약) [바로가기](#)

한국금융연구원

2023년 4월 말 일부 종목의 주가 폭락 사건을 계기로 증권관련 범죄 방지에 대한 요구가 비등함. 자본시장과 관련한 범죄행위들의 직간접적 해악을 감안할 때, 범죄 적발 확률 제고, 처벌 수준의 강화, 피해자 보상 등 다각도에서 가용한 모든 범죄 억제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임. 또한 가용한 범죄 억제 수단 자체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입법·사법·행정부와 자본시장 참여자 공동의 노력이 요구됨.

5. 뉴스브리핑

출처

■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내용요약)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자체조사 결과 572건 15억 원 적발
- 지자체,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한 환수조치 등 법적조치 이행
-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보고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월), 17개 시·도 기초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한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23년 세계경제성장률 2.7% 한국경제 성장률 1.5% 전망

(내용요약)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6.7일(수)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흐름이 여전히 취약(fragile)하다고 진단하였다.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기업 심리가 반등하고 중국 리오프닝이 세계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근원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고금리 영향이 자산·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7%로 둔화('22년 3.3%)된 후 '24년에는 2.9%로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하락, 공급망 차질 완화 등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년 2회의 본전망(6월·11~12월, OECD 회원국 대상), 2회의 중간전망(3월·9월, G20 대상)을 발표

5. 뉴스브리핑

출처

■ 마을기업으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성장동력 찾는다

(내용 요약)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 지역자원 활용해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 41개 선정
- 지역 향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홍보, 제품 개발·컨설팅 등 사업비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 41개를 선정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을 지칭하며,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약 1,700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41개의 마을기업에는 제품 개발, 시설 확충, 자문(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우수 마을기업에는 최대 7천만 원, 모두애(愛) 마을기업에는 1억 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체국 쇼핑몰을 통한 판촉행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을기업에 대한 홍보 및 제품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 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 위한 공모사업 추진

(내용 요약)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주행, UAM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구현될 수 있는 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을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6월 12일부터 8월 4일까지 8주간 공모를 통해 지자체 신청을 받은 후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8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유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할 예정으로,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도시 내 공간을 도시계획 시점부터 첨단모빌리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이 가능한 신규도시 1개소에 대해 마스터플랜 등 도시계획 수립비 최대 7억원(국비)을 지원하고,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은 각 지역 여건에 맞게 특화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하여 이동성이 최적화된 도시로 전환하는 기존도시 2개소에 대해 국비 최대 연 10억원(지방비 5:5 매칭), 최대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되어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도시